

취약계층 지원 '긍정적'... 소비 진작 '미지수'

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인해 위급해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비진작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일소크에 근접... 특대책 필요 =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유가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유가는 최근 137.5달러로, 1980년 2차 오일쇼크의 150.2달러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 물가상승, 소득 정체 등으로 여러모로 상황을 맞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자영업자·저소득·장애인·농어민 등의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감세, 투자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고유가 응급처방책' 민생고통 덜어질까

공공요금 동결로 인플레이 기대심리 억제 도움

화물연대 "인상분 산정 잘못돼 환급 하나마나"

◇전문가들 "방향은 바람직" =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감면이 아닌 재정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해 방향은 바람직하고 최소한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비진작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지원대상을 끌고루 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을 위해 많은 지원금을 배정했다"며 "연 24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취약계층 지원 긍정적, 대책은 임시방편" =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 자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이런 경제 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 취약 계층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며 긍정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다만 주요 거시 정책인 환율과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며 "이번 경제 불황에 외부 충격이 컸던 만큼 환율·금리 정책 등의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우문순 대변인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 환급을 해 준다고 해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임시방편보다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뺨질식 처방'이라는 의견과 정부의 추후 재정 마련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세금 폭탄' 등에 대한 우려 등을 내놴다.

한편 화물연대는 "경유 기준가를 1천800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만 절반을 환급 해주기로 한 것은 각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갖고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금융권 취업문 좁다

하반기 채용 축소... 계획도 안잡아

올 하반기에 금융회사에 취업하기가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이 예년보다 채용인원을 줄일 예정인 데다 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공기업들은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슬림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들 기관의 취업문도 훨씬 좁아져 금융권으로 구직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연합뉴스가 은행·카드·보험사 등 34개 금융회사들의 하반기 채용 예정인원을 집계한 결과 이들 회사들은 최대 2천150여 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에 공채를 하지 않은데 이어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43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명 안팎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작년 하반기에 220명을 채용했으나 올 하반기에는 100~150명 가량을 선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작년(304명)보다 줄어든 영업점 창구직원 100명과 종합직 100명 등 총 200명을 뽑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작년과 비슷한 2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인력을 좀더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채용인원을 작년 하반기 214명에서 올해는 300명으로 늘려 잡았으며 농협은 예년과 비슷한 150~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민영화의 회오리 속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60~70명을 공개 채용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각각 10명과 40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서 신규채용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 재벌규제 완화 '속도조절'?

금융수장들, 무분별한 재벌 공기업 인수 확장 잇단 경고 메시지

재벌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정부의 기업정책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족쇄를 풀어주던 규제 당국의 수장들이 잇따라 재벌의 영토확장에 대해 경각반을 울려내고 있다.

8일 경제전문가들은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정서가 강한 재벌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집단이 공기업들을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할 때 이런 우려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들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벌들은 국민의 이같은 기업에 대한 시각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토확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던 금융위원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장은 지난 5일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민영화 추진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벌이 산업은행을 갖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래 3단계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상황의 추이를 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 등을 감안해 최후의 코스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문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정부가 당분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육우고기 맛있어요" 한국농축육우협회가 정한 육우데이(6월9일)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육우고기 무료 시식회장에서 시민들이 고기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그룹 중 13곳 '경영권 승계' 완료

삼성·롯데·동부 등 경영권 이양... SK·현대중 등 5곳은 2세 참여 아직 없어

국내 50대 그룹 가운데 13개 그룹에서 2세대들이 지주회사나 핵심기업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계 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이 국내 50대 그룹(자산총액 기준) 지주회사 및 핵심기업의 최대주주 및 자녀 지분내역을 조사한 결과 삼성·롯데·동부·KCC·대한전선·현대백화점·에경·영풍·대영·농심·일진·대신·동원 등 13개 그룹이 지분구조 상 경영권이 이양됐다.

삼성의 경우 이재웅 삼성전자 전무가 그룹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25.1%를 보유해 최대주주이

며,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도 롯데소금 지분 14.59% 등을 갖고 있어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KCC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진 그룹회장에게, 현대백화점은 정몽근 명예회장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에경은 장영신 회장이 장남인 채형석 에경 부회장에게 핵심기업의 최대주주 자리를 넘겼다.

아직 2세의 지분율이 미흡한 대부분 기업에서도 그룹 핵심기업의 지분이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

구분주 LG그룹 회장의 아들 광모씨의 경우 2005년 5월 말 LG의 지분

율이 2.80%이었으나 지난달 말 현재 4.45%로 급증한 것을 비롯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 동관씨의 한화 지분이 3.47%에서 5.34%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장남 세창씨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이 4.21%에서 4.71%로,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원희의 두산 지분이 0.28%에서 4.16%로 각각 늘어났다.

상당수 대기업에서 지분 이양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SK·현대중공업·코오롱·현대산업개발·교보생명 등 5개 그룹에서는 아직 2세들의 지분 참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수상한 고소득 전문직

소득 증가 불구 현금영수증 발급률 하락

변리사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들이 수입은 늘었음에도 세원 포착의 주요인 근거인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통합민주당)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지난해 사업장 당 소득이 2006년에 비해 대부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변리사의 경우 사업장당 소득이 6억5천600만원으로 전년(5억8천200만원)에 비해 12.7%, 대부분의 의사인 의료업자는 4억2천400만원으로 전년(3억8천600만원) 대비 9.8%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른 전문직들도 변호사(3억5천만원→3억9천200만원), 공인회계사(2억4천500만원→2억7천900만원), 세무사(2억2천500만원→2억3천800만원)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수입과 달리,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모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변리사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2006년 37.1%에서 지난해 30.9%로 떨어졌고 변호사도 같은 기간 47.8%에서 36.3%로 낮아졌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2006년 44.8%였던 발급비율이 지난해는 29.2%로 크게 떨어졌고 이밖에 세무사(56.0%→43.2%), 법무사(64.1%→51.2%)도 모두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업자도 2006년에는 97.3%였지만 지난해는 96.7%로 낮아졌다.

돈을 지불한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문직의 세원포착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연합뉴스

기름·가스값 급등 전기 사용량 '경총'

1~4월 판매량 전년비 8% ↑

기름값과 가스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값이싼 전기의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전력판매량은 모두 1천343억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41억6천kWh에 비해 8.18%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4월 전력판매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3.55%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또 올해 4월까지의 전력판매 수입은 10조1천9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8%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4월 전력판매 수입의 증가율이 5.4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요금들은 지난해 1월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었지만 보일러 등유 판매가격은 6월 첫째주에 1kg당 1천523원으로 지난해 1월의 873원에 비해 74.5% 급증했고 실내등유 판매가격도 같은 기간 74.3% 올랐다. LPG(일반용 프로판) 판매가격 역시 지난해 1월 kg당 1천226원에서 올해 6월 첫째주에는 1천828원으로 49% 인상됐다. /연합뉴스

5천㎡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10월부터 시행

이르면 10월부터는 단독주택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심의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의 결의로 대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유가 고공행진 식음료·공산품 등 생필품값 치솟자

소단위 판매 상품 인기

기존의 절반, 3분의 1 수준 제품

5월 판매량 작년보다 50% 급증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식음료·공산품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단위 상품이나 에너지 절약형 상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이마트에서는 골뱅이(140g)나 캔옥수수(198g), 마늘(120g) 등 기존 용량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소용량 가공식품의 5월 매출이 작년 동월보다 50%나 증가했다. 작년 7월 처음 선보인 미니참기름(55ml), 미니케첩(65g) 등도 5월 매출이 출시 초기의 2~3배로 늘었다.

채소류도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포장

해 판매하고 있는데 조선부추의 경우 일반적인 500g짜리를 250g로 줄인 소단 제품 매출이 역시 작년 5월 대비 30% 올랐다.

파인애플·메론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 담근 '간편 조각과일'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롯데마트에서도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분량의 채소만 담아 판매하는 '샐러드와 간편야채' 제품군의 올해 3~5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4.3% 성장했다. 기존 1kg짜리 대용량 냉동만두를 절반 크기로 나온 제품과 스틱형·소용량 조미료도 10% 이상씩 매출이 늘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288회)			팝콘복권 (제11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2 17 28 35 41	10		1	5억	2주 442065
			2	1억	4주 129554
			3	1천만	4주 909056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2등 86147
					3등 7177
					4등 53
					5등 33
					6등 90
					7등 4
					8등 5
					9등 3